

오피니언

월/요/광/장

이미란



언젠가,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가까운 분이 상담을 해 왔다.

큰애가 이제 중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사춘기의 예민한 나이이니, 버겁더라도 급식비를 내면서 다른 아이들처럼 먹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다달이 급식비를 낼 만큼 여유가 있는 형편이 아닌데도, 새 친구들을 만나서 눈치를 보게 될 아이의 마음을 걱정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아이를 만나, 무상급식을 받는 일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다. 너는 네 부모의 아이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아이이기도 하다는 것, 너를 양육할 책임이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있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낸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가 손바닥으로 눈시울을 훔겼다. 아이가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면 내 말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제 집의 형편 때문이라.

학교에서 저소득층의 아이들만 골라내어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전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선은 밥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아이들이 없어질 것이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

학교가 희망이다

라는 증명서를 내고 가난한 아이로 분류되어 눈치밥을 먹는 아이들도 없어질 것이고, 부모의 실직이나 이혼, 갑작스런 병마로 급식비를 내지 못해 밥을 굶는 아이들도 없어질 것이다.

또한 의무교육기간 동안 학부모 학교 부담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급식비에서 자유롭게 뺄으로써 중간 계층의 가정 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공교육의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여 올바른 식습관을 길들이고, 나눔의 공동

체 의식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는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는 일일 뿐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가 함께 키운다는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복지의 혜택이 빈곤·소의 계층에게 집중되는 것을 '간여적 복지'라고 하는데, 이는 시혜적 복지의 개념이며,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을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 차원의 복지 개념이다. 빈곤층에 대한 선택적 무상급식은

학교가 희망이다

'간여적 복지'에 해당하며, 의무교육을 받는 전체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형태라고 하겠다.

우리가 흔히 복지국가라고 부러워하는 북유럽의 나라들은 모두 이 '보편적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국가들이다. 불행의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 구조의 한계로 보고,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항상적인 사회보장 제도나 복지제도로써 구성원 모두에게 삶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국민 1인당 GDP가 이만 달러, 국가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을 오르내리는 우리도

이제 이러한 복지 수준을 누릴 만큼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보편적 복지국가에로의 출발은 학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부모보다 신분 상승을 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세대간 이동성'의 지수가 높을수록 기회의 평등이 실현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습 부자만이 존재하고, 의학전문대학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높은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는 나라라면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부모의 소득 수준이 아이들의 교육 수준을 결정하고 교육이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일을 보편적 제도로써의 다양한 교육 복지를 통해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에산정책실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2015년까지 5년간 총 8조7천622억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 매년 20조 이상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유층 감세, 이를 예전 수준으로 되돌리거나 해도 교육의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들을 획기적으로 운영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전남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소설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야구장 건립, 시민 여론 수렴 선행돼야

광주시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돐구장 건설이 해당 건설사 측의 포기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광주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던 포스코건설은 지난 5일 재원 확보 미흡 등을 이유로 돐구장 건설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일부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형성해 돐구장 건설에 나설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으나 일단 돐구장 건설은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

포스코건설의 돐구장 건설 포기로 지역사회의 적지 않은 과장이 일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까지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광주시가 사업 추진을 서둘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돐구장 추진에 앞서 시민 여론 수렴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돐구장 건설은 처음부터 찬반 논란을 야기시켰다. 광주시가 민자유치로 돐구장 건설을 추진한 것은 지방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돐구장과

함께 건설하려던 신도시 계획에 대해 특별시비와 함께 재건축 시장 위축과 구도심 쇠퇴 우려 등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포스코건설이 돐구장 건설을 접은 데는 불확실한 수익성 확보와 함께 지역사회 반발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제 야구장 건립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 등 충분한 시민 여론 수렴을 수렴해 최적 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형태의 야구장이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것인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돐구장과 개량형 야구장의 장단점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

현재의 낡은 야구장을 대신할 새로운 경기장 건립은 시급한 지역현안 중의 하나다. 야구 명가 광주의 자존심을 살리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지역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민주 '공천개혁' 못 이루면 미래 없다

민주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의 광주시장 후보 경선 방법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당 지도부가 제시한 '시민 공천 배심원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배심원제 도입 여부는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여 더욱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우리가 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 관심을 갖는 것은 민주당이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절대적인 정치적 영향력 때문이다.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선거는 사실상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초단체장 선거 역시 민주당의 입김이 막강한 게 지역의 현실이다. 민주당이 공천을 잘하느냐, 잘못하느냐에 따라 지역

의 미래가 좌우되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번 지방선거 공천은 공정하고, 지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당내 계파 간의 나눠먹기나 줄서기 등 당리당략에 따라 이뤄졌던 안

을 수용하고 지역민심을 반영하는 공천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는 당과 국회의원, 당원, 후보군 모두의 살신성인(殺身成仁) 정신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민주당이 과거처럼 호남지역은 누구를 내놔도 당선은 '때놓은 대상'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갖는다면 큰 오산이다. 민주당에 대한 지역민심의 변화는 벌써 감지되고 있다. 지역일꾼은 당이 아닌 인물을 보고 투표하겠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민심을 거슬러는 공천을 한다면 텃밭을 잃을 수도 있다는 엄청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민주당은 호남에서의 공천개혁을 통해 지방선거 바람을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그 개혁이 민주당이나 특정계파만을 위한 개혁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건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개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고

송광운



준법의식과 신뢰 같은 무형의 사회질서를 경제학에서 '사회적 자본'이라 부른다. 경제학자들이 사회자본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계량화했는데 사회적 자본지수가 10%가량 올라가면 성장률은 0.8% 정도 상승한다고 한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사회적 자본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사회규범지수가 10점 만점에 5.19점으로 OECD 29개국 가운데 24위였다. 사회적 자본이 취약하다는 것은 기초

들어 놓은 기준을 지키면서 원칙과 기부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 사회적 자본 지수가 높은 선진국들은 뿌리 깊은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안정된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기초질서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나라일수록 풍요로운 혜택 속에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해준다. 기초질서를 얘기할 때 자주 거론되는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깨진

건강사회 출발점 '기초질서 지키기'

질서나 사회규범에 대한 준수의식이 낮고 상호신뢰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해주는 경제효율을 높여주는 핵심이 바로 기초질서와 사회규범이다. 우리나라 사회적 자본수준이 경제수준과 똑같이 간다면 벌써 국민소득 2만 달러의 뒷에서도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그 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1994년 뉴욕시 시장이 취임한 부울프 폴리아니 시장이 보행자의 신호위반이나 쓰레기투척 같은 기초질서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범죄를 감소시켰다고 한다.

2010년부터 광주에서는 골치아픈 국제적 행사가 연이어 개최된다. 올 4월에는 세계광역스포, 2011년에는 세계환경영역스포, 2013년 세계공예영역스포, 2014년 세계수소에너지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대형 스포츠이벤트들 함께 개최된다. 그리고 2015년에는 선수단 규모만 1만5천여 명에 달하는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린다. 향후 5년간 글로벌 이벤트를 맞이하는 광주로서는 브랜드를 높이고 이미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계기를 맞이할 셈이다. 북구 역시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민주·인권도시로서의 위상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최근 북구는 5개 자치구 가운데 기초질서를 가장 잘 지키기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광주시가 질서와 친절,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중 4차례에 걸쳐 강도 높게 평가한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기초질서 지키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범구민 운동본부 결성하고 주민주도의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벌여오는 등 북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큰 공로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기초질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질서의 선진화는 의식의 선진화에서 비롯된다. 공평한 사회,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사회가 바로 선 사회고 튼튼한 나라다. 철저한 기초질서 지키기를 통해 북구를 한 단계 도약시켜보자. <북구청장>

요양보호사에 '손 빨래하라'...파출부 취급 불쾌

아내가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데 최근 6순이 넘은 할아버지를 돌봐드리는 일을 맡았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요양보호사를 허드렛일 하는 정도로 대하더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노인의 친척이라는 사람까지 찾아와 아내를 세탁기가 있는데도 손빨래를 하라는 등 파출부로 취급하더라고 했다. 이 일은 그 특성상 개인의 수발을 드는 업무이기 때문에 약간 허드렛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

지만 따지고 보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개인이 손발이 되어 그분들의 생활을 돕는 것이지, 그분들의 가정부가 되어 맘대로 부러먹는 존재는 아닌 것이다. 앞으로 요양기관의 난립을 막기 위해 지정제로 전환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좀더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김기원·광주시 서구 세하동>

기고

조영택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둔다" 지난 1일 발표한 우리 민주당의 정책 약속이다. 이 한마디에 절박한 우리 경제의 문제점과 해법이 모두 담겨 있다. 오늘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는 일자리다. 이명박 정부가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외쳐대고 있지만,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연 7% 성장, 일자리 300만 개 창출' 대선공약도 모두 물거품이 되고 있다.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는 경제살리

세가 이루어졌지만 그 91.2%가 상위 6.7%의 기업에 집중됐다. 반면, 중하위 33%의 기업은 아무런 혜택이 없었다는 것을 볼 때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임이 명확해진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5.1('05년)로, 중소기업(15.1)의 33.8%에 불과하다. 대기업 고용창출효과가 낮고 경제성장 기반확충에 도움이 되지 않는 대기업 중심·토목공사 위주의 경제정책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용

고용 통한 성장전략 짚 때

기에 올인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투자와 민간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고용확대를 도모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다. '희망근로'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1조3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 12.6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민간부문 고용창출로 전혀 연계되지 않았다.

이를 위해 먼저 일자리창출 효과는 높은 중소기업 중심의 육성정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성장가능성이 커 고용창출력이 큰 미래산업인 부품소재산업과 서비스업, 문화산업 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업과 문화산업은 국가적 경쟁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09년 취업자는 2,350만 명으로 전년보다 7.2만 명이 줄었다. '05년 29.9만 명, '06년 29.5만 명, '07년 28.2만 명이 이어 '08년 14만 명 늘어난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했다. 상황이 이러한 데는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가 토목공사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09년 SOC예산으로 24.7조 원을 쏟아부었다. 이는 전년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참여정부 5년간 SOC예산 평균 증가율이 2.5%였던 점을 감안하면 10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그럼에도, 작년 건설업의 일자리는 오히려 9.2만 명 줄었다. 올해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4대강 사업 역시 좋은 일자리와는 연인이 없다.

또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료·보육·교육 등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구조의 재편 또한 핵심적인 사안이다. 그럼에도, 올해 일자리 예산은 작년 추정 대비 23.5%(1.1조원) 삭감됐다. 중소기업 관련 예산 역시 작년보다 6.4조원(30.8%)이 줄었다. 이명박 정부에 일자리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사회적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온 노력을 기울였던 김대중·노무현 두 분 전직 대통령이 더욱 그리워진다. <국회의원>

나중에 아파트 관리소에서 점문가들을 불러 비상벨을 울리고 실내에서 측정을 해보

아파트 화재경고 비상벨 추가 설치 해야

일마 전 초등학교 아이들이 아파트 복도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종이에 확 붙은 불 때문에 아파트 복도가 연기로 가득 찼고 그 때문에 불이 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아파트 내의 비상벨이 울렸던 모양이다.

40dB이 나왔다. 즉 비상벨을 울려도 아파트 안방에는 아무 소음이 없을 때만큼 조용하다는 뜻이었다. 한마디로 화재시 잠을 자고 있었다면 이 비상벨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였다.

물론 큰불이 난 건 아니어서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화재시 작동하는 비상벨이 울렸는데 적잖은 세대에서 그 비상벨 소리를 못 들었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나중에 아파트 관리소에서 점문가들을 불러 비상벨을 울리고 실내에서 측정을 해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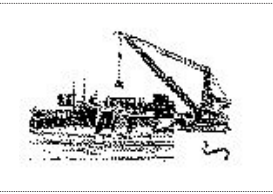
그러므로 아파트 내의 화재경고용 비상벨은 복도는 물론이고 아파트 실내 거실이나 주방 쪽에 추가가 하나 더 설치하도록 규정을 바꿔줄 것을 건의한다. <▲이미경·광주시 북구 태령동>

無等鼓

광양항을 부산항과 함께 초대형 중심항만(Mega Hub Port)으로 개발하는 것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의 중심구상이었다. 이른바 양항(Two-Port)체제다. 여기에는 광양항의 지리적 여건도 뒷받쳤다. 유럽과 북미를 연결하는 세계 주요 간선 항로상에 위치해 화물 환적에 유리하며 자연방파제인 여수반도 덕분에 연중 360일 이상 하역이 가능하다. 평균 16m의 깊은 수심과 대륙연계 철도수송의 출발점이라는 것도 강점이었다. '해양 실크로드'를 수 있는 천혜의 입지를 갖춘 셈이다. 광양컨테이너부두는 1997년 1단계 준공 이래 현재 5만t급 14선식, 2만t급 2선식을

너부두 건설 및 확장에 나선 다른 지자체에 발미를 쫓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려온 양항 정책은 인천과 포항, 울산, 광택 등의 가세에 따라 멀티포트(Multi-Port)로 변질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나행인 것은 국내의 유수의 항만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지난해 광양항이 전년도 수준인 181만TEU를 반도 덕분에 연중 360일 이상 하역이 가능하다. 평균 16m의 깊은 수심과 대륙연계 철도수송의 출발점이라는 것도 강점이었다. '해양 실크로드'를 수 있는 천혜의 입지를 갖춘 셈이다. 광양컨테이너부두는 1997년 1단계 준공 이래 현재 5만t급 14선식, 2만t급 2선식을

'투포트' 광양항



이제 광양항의 자생력을 높여나가기 위한 지역사회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 로컬 화물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 활동에도 불구하고 물동량 성장세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국내 2위의 항만이면서도 실제 처리 물량은 하역능력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다.

이제 광양항의 자생력을 높여나가기 위한 지역사회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 로컬 화물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 활동에도 불구하고 물동량 성장세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국내 2위의 항만이면서도 실제 처리 물량은 하역능력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다. 이는 물류비 절감을 명분으로 컨테이

/정후식 경제부장 who@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